



경제6단체장들이 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열린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경제 6단체장과 간담회를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왼쪽부터)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뉴시스

소·부·장 등 경제협력 공감대 형성… “원활한 거래 중요”

〈소재·부품·장비〉

기시다 총리, 경제 6단체장 회동
주일대사관 주최 티타임 형태 진행
최태원 “각자 위치에서 협력 모색”
구자열 “양국 공동이익 추구해야”

일본 총리로는 12년 만에 한국을 방문한 기시다 후미오 총리가 8일 서울에서 경제 6단체장들을 한꺼번에 만나며 한일 경제협력 확대 방안을 논의했다. 특히 그간 양국이 갈등을 빚어온 반도체 소재·부품·장비 분야에서 다양한 민간 차원의 경제 협력을 늘리는 데 공감대를 보인 것으로 알려졌다.

기시다 총리는 8일 오전 10시 서울 중구 롯데호텔에서 국내 6개 경제단체장들과 회동했다. 비공개로 열린 이 만남은 주한일본대사관이 주최하는 티타임 형태로 진행됐다. 이날 회동에는 김병준 전국경제인연합회 회장 직무대행, 최태원 대한상공회의소 회장, 구자열

한국무역협회 회장,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 김기문 중소기업중앙회 회장, 최진식 한국중견기업연합회 회장 등이 자리했다.

김병준대행은 회동 장소로 들어서며 “의제는 우리가 제기하기보다는 기시다 총리가 여러가지를 가지고 와서 (그걸 논의할 것)”이라며 “우리도 나름대로 한일 경제협력과 관련한 더 큰 문제를 논의하겠다”고 말했다.

그는 지난 3월 경단련(케이단렌)과 합의한 ‘한일·일한 미래파트너십 기금’과 관련, “일본 쪽에서 위원회를 만드는데 운영위원장과 운영위원을 우리 쪽으로 제안해온 상태”라며 “공동운영 위원장은 제가 되고, 운영위원 두 분을 모시는 그런 절차를 밟고 있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이번주 제가 일본에 가서 계속 상의할 것”이라며 “(운영위 구성은) 재계 인사들로 하려 하는데 일본 쪽

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김 대행은 “기본적으로 한일 경제협력을 강화하자는 이야기를 나눴다”며 “양국이 협력해 희귀 광물 자원이나 에너지 분야 이런 데서 협력을 강화해가자는 이야기를 했다”고 전했다.

손경식 회장은 “안보, 경제, 문화 등 다양한 분야에서 상호 협력이 강화될 수 있도록 우리 경제계도 적극 노력하겠다”며 “두 나라 기업들의 협력은 시너지 효과를 일으켜 양국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밝혔다. 그는 “12년 만에 정상회담이 개최되고 서둘러외교가 복원되면서 한일관계 개선에 대한 기대가 크다”면서 “양국 관계 개선은 미국, 유럽연합(EU) 등 국제 사회가 환영과 지지를 보내고 있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경제, 안보, 공급망 즉 서플라이체인에 대한 높은 관심에 크게 감사드린다”고 덧붙였다.

손 회장은 민간 교류의 대표적인 행

사인 ‘한일축제한마당’의 실행위원장을 맡고 있다. 그는 “한일 간 최대 민간 교류 행사로 매년 9월 서울과 도쿄에서 개최되는 한일축제한마당의 한국 측 실행위원장으로서 일본 측의 적극적인 협력 아래 양국 국민, 특히 청소년 세대가 교류를 확대해가고 있다”면서 “인적 교류 확대를 소망한다”고 밝혔다.

최태원 대한상의 회장은 “경제 협력에 대해 서로 각자 역할을 다하자고 말을 나눴다”며 “서플라이 체인(공급망) 관련 전체적인 이야기를 나눴다”고 말했다. 대한상의는 이달 말에는 간사이 경제연합회와 온라인 간담회를 개최하며, 다음 달 9일에는 6년 만에 한일상의 회장단 회의를 부산에서 재개할 예정이다.

구자열 회장은 “경제 안보가 어느 때보다 중요해진 시점에서 양국은 해외 자원 공동 개발 및 핵심 전략 물자의 공급망 협력을 통해 공동 이익을 추구해

야 한다”며 “수소 등 에너지 신기술 개발이나 생산·공급 협력 또는 제3국 공동 진출을 추진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회장은 이날 오후 일본으로 출국, 4일간 정·재계 인사를 면담하고 세미나와 전시상담회 등을 진행할 예정이다.

김기문 회장은 “소재·부품·장비 분야 중소기업에 대해 일본과의 원활한 거래가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김 회장도 “일본 중소기업과 원만한 거래가 이어지길 바라기 때문에, 한국 뿐 아니라 일본도 그런 쪽에서 좋은 관계를 유지해달라고 권유하려 한다”며 “소부장(소재·부품·장비) 문제도 얘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 회장은 이어 “원천기술은 일본이 앞서기 때문에 거기서 부품소재를 가져다가 가공해 대기업에 납품하고 수출도 하는, 이런 문제에 대해서도 굉장히 효과 높을 것”이라고 기대했다.

/양성원 기자 ysw@metroseoul.co.kr

한일의원연맹, 기시다 총리 면담

“관계 정상화 결단” vs “문제해결 노력해야”

〈興〉

〈野〉

興, 부산엑스포·G8 지원 부탁

野, 오염수 방류문제 등 아쉬움 표해

한일의원연맹 여야 간사단이 8일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 만났다. 이 자리에서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정진석 국민의힘 의원은 한일 정상회담 성과에 대해 부각하는 한편, 일본에 부산세계 엑스포 유치 및 G8 참여 지원을 부탁했다. 한일의원연맹 간사장 자격으로 참석한 윤호중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과거 사 문제 및 후쿠시마 오염수 방류 문제에 대해 거론한 뒤 아쉬움을 표했다.

한일의원연맹 여야 간사단은 방한이틀째인 기시다 총리와 이날 오전 서울 소공동 롯데호텔에서 만났다. 일본 측 요청으로 성사된 만남에서 이들은 지난 7일 윤석열 대통령과 기시다 총리 간 한일 정상회담에서 다뤘던 현안에 대한 의견을 교환했다.

기시다 총리와의 면담이 끝난 뒤 정진석 의원은 기자들에게 “12년 만에 한·일 정상 간 서둘러외교가 복원된 데 대해 환영의 뜻을 전했고, 한일 관계가 속도감 있게 정상화된 데 대해 무엇보다 양



한일의원연맹 회장인 국민의힘 정진석(오른쪽) 의원, 간사장인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이 8일 서울의 한 호텔에서 기시다 후미오 일본 총리와의 면담을 마친 후 이동하고 있다.

/뉴시스

국 정상의 용기와 결단이 큰 동력이 됐다고 평가했다”고 밝혔다.

이어 “강제징용 피해자에 대한 기시다 총리의 따뜻한 메시지도 매우 인상적이었다. G7(주요 7개국) 정상회의 개최, 히로시마에 있는 한국인 원폭 희생자 위령비 참배 제안, 후쿠시마 오염수와 관련 한국인 건강·안전 문제에 대해 반드시 약속하겠다는 정상회담에서의 표현도 인상적이라고 평가한다고 말했다

다”고 덧붙였다.

하지만 한일의원연맹 간사장인 윤호중 의원은 “6년 전 문재인 당시 대통령 특사로 일본에 방문했을 때 외무대신이었던 기시다 총리를 만나 정상 간 서둘러외교 복원을 요청한 바 있다”면서 “기시다 총리가 2015년 아베 신조 총리의 ‘더 이상 사과하지 않는 나라를 만들겠다’는 담화에도 ‘과거 역사에 대해서 반성과 사과를 해야 한다’고 아베 총리를 설득하던 모습을 상기시켰다. 과거사 문제에 대해 김대중·오부치 공동선언 정신에 따라 역사를 직시하고자 하는 양국 정상 노력이 필요하다고 말했다”고 전했다.

윤 의원은 “한일뿐 아니라 한·미·일 간 안보 협력이 본격적으로 논의되는데, 일본 측이 안보 협력을 이야기하면서 러시아·중국과 마찬가지로 한국에 대해서도 양국 간 갈등 사안을 안보 문서에 게재하게 된 것에 대한 모순점을 지적하고, 원활한 안보 협력을 위해 안보 문서 재개정도 고려해 봐야 할 것이라고 요청했다”고 강조했다.

/최영훈 기자 choiyoungkr@

野 “과거 팔아 미래로 나아갈 수 없어”

≫ 1면 ‘반도체 공급망 구축…’서 계속

기시다 총리는 회견 후 ‘어려운 환경 아래 있던 분들이 강제징용 피해자인가’라는 질문에 답하지 않은 채 “제 자신의 개인적 심정을 솔직하게 말씀드린 것”이라고 답했다.

이는 유감 표명은 유지하되, 사건임을 전제로 함으로써 의미를 축소한 것이라 분석이다. 아울러 일본 측 배상 참여 부분에 대해서도 별도의 언급은 없었다.

이에 대해 야당은 한일정상회담 결과를 두고 과거를 팔아 미래로 나아갈 수 없다며 강하게 비판했다.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는 8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이번 한일정상회담에서도 빈 잔을 채운 건 역시 윤석열 정부”라며 “오히려 한술 더 떠 일본의 식민침략에 대한 면죄부 발언을 또 다시 추가했다”고 말했다.

이 대표는 “강제동원 배상 재검토는 언급조차 없었다. 일본의 독도 침탈에 대해서도 한마디 언급을 못 했고 우리의 외교적·군사적 자주권을 일본의 인도·태평양 전략에 종속시킨다는 지적까지 나오고 있다”며 “후쿠시마 오염수 시

찰단은 오염수 방출의 들러리로, 오염수 방출 정당화에 악용되지 않을까 우려된다”고 강조했다.

이어 “한일관계 정상화는 필요하고 찬성한다. 그렇다고 해서 우리의 국익과 국격, 역사 정의를 재물 삼아서는 안 된다”며 “정부는 이번 정상회담을 서둘러회복복원이라 자랑하지만, 안타깝게도 ‘뺨서틀외교’ 같다는 국민 일각의 자조적 할난에 귀 기울여야 한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통령실 관계자는 “양국 정상이나 회담 전 한국과 일본의 참모진들이 과거 문제에 대해서 협의하거나 사전에 조율한 적은 없다”며 “저희들 생각에는 기시다 총리가 한국에 올 때 나름대로 생각한 본인의 인식, 발언을 직전에 준비했다가 자발적으로 말한 것으로 추측된다”고 설명했다.

이 관계자는 “히로시마 G7 방문 계기에 윤 대통령과 히로시마 평화기념공원에 함께 방문해 한국인 원폭 피해자 위령비에 추모했으면 좋겠다는 제안은 앞으로도 말과 행동으로 과거사에 대해 진정성 있는 행보를 이어가겠다는 표현이 아닌가 생각한다”고 덧붙였다.

/박정익 기자 pathfinder@